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
농지연금제도 개선

거시경제 동향

201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인식조사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

※ 본 자료는 2013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대책 마련: 소비자 신뢰 제고,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시설 확충 등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배경]**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인증농산물에 대한 불신'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
- **[목적]**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유통개선
 - **(소비확대)** 소비자 신뢰도·인식 제고 및 유통효율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 **(안정적 판로확보)** 직거래·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제공 및 적정 수취가격 보장
- **[중점사항]**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 확대와 구매접근성 확보, 도매시장 거래활성화, 직거래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 조직화·규모화

□ 추진대책

1)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

- 소비자·생산자 대상 친환경농업의 가치 및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과 신뢰 제고
 - 영양사·교사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확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식생활 캠프 운영
 - 주부를 대상으로 유기농 스쿨 운영, 친환경 소비자 리포터 활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유통현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16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장, 대형판매장 및 학교급식 등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조사 확대

2) 정가수의 매매 확대, 전문법인 육성 등을 통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도매법인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농산물 정가·수의 매매 확대: ('12) 2% → ('17) 6

○ 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법인, 중도매인 육성 및 전용공간 확보

※ 직거래매취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계획: ('13) 0억 원 → ('15) 100 → ('17) 100

3) 생산자·소비자 연계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대량 수요처 발굴

○ 친환경농업 비중이 큰 산지에 로컬푸드 전문매장, 공동작업장 등 시설 설치 자금 지원

○ 생협·영농조합법인 등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원물 구매자금 및 소비지 판매장 개설 지원

○ 학교급식 공급 확대, 공공기관·병원 급식 등 대량 수요처 발굴 추진

4) 친환경농산물 산지 거점조직 육성 및 유통 시설 확충

○ 친환경농업단지(지구)를 산지 거점 생산조직으로 육성

※ 광역단지 조성 목표: ('13) 44개소 → ('15) 60

○ 권역별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건립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등 물류 장비 확충 지원

※ 저온 및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지원: ('13) 77억 원

5) 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수요 확대

○ 유기가공식품 명품화를 위한 가공 및 위생안전시설 설치 지원

○ 가공식품 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 등 R&D 지원

○ 유기가공식품 고부가 명품 수출산업으로 육성

- 유기가가공 식품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T/F 구성 및 유기가가공 식품 산업 육성 방안 마련(11월 말)

※ 유기가공식품 시설 지원: ('13) 50억 원 → ('17) 70

주요 농정 이슈_2

농지연금제도 개선

※ 본 자료는 2013년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내년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 연금가입비 폐지 및 이자율 인하 등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지연금 개요

○ [개념]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 가능

○ [가입자격]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이하

○ [지급방식]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회),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5년, 10년, 15년)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 [지급실적] 농지연금 2,826건 가입('13.8월 말 기준)

가입(건)			평균 연금액(만 원)			담보농지(㎡, 백만 원)	
계	종신회	기간형	계	종신회	기간형	평균면적	평균평가액
2,826	832	1,994	81	87	79	4,274	130

※ 가입자 평균연령: 74세

○ [문제점]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지적사항 제기

□ 개선사항 및 요약

○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법]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

-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 [가입비*] 폐지

※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 시 부과(담보농지가격의 2%), 연금가입 담보농지가격이 1억 원인 경우 가입비는 200만 원

○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 4% → 3% 인하

※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 기대

○ [개선 기대효과]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0천 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4천 원으로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예시: 74세 농업인, 농지가격 1억 원, 종신행, 90세 해지 전제>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교
월지급금	45만 원	53	8 ↑
가입비	200만 원	0	△200
총 채무액(해지 시)	142백만 원	126	△16*

주: 총 채무액에는 가입비가 포함된 개념

거시경제 동향

201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9월 1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3% ↓

- (농림수산물) 채소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5.4% 상승

※ 전년 동월대비 4.6% ↓

- (공산품) 전기 및 전자기기, 1차금속제품은 내렸으나 화학제품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1% 상승

※ 전년 동월대비 2.5% ↓

-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등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대비 0.4%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3년				2013년			
		5월	6월	7월	8월p	5월	6월	7월	8월p
총 지 수	1000.0	-0.3	0.0	0.0	0.3	-2.6	-1.4	-1.0	-1.3
농 립 수 산 품	33.8	-2.8	-1.2	0.7	5.4	-9.7	-5.9	-4.8	-4.6
곡	7.2	0.4	0.5	-0.2	1.0	-0.5	1.3	2.7	5.0
채 소	6.6	-17.4	-10.0	4.1	25.2	-5.2	2.9	0.3	-0.5
과 실	8.5	-0.4	6.3	-1.6	2.9	-8.6	-3.8	-2.1	-0.1
축 산 물	5.5	1.8	-6.7	3.9	0.0	-0.6	-5.0	-1.5	-3.0
공 산 품	611.4	-0.4	0.1	-0.2	0.1	-4.4	-2.7	-2.1	-2.5
석탄및석유제품	57.8	-1.3	1.1	1.7	0.0	-8.5	-0.6	1.2	-3.9
화 학 제 품	107.5	-1.0	0.2	0.1	0.7	-4.2	-0.1	1.2	0.4
1 차 금 속 제 품	115.1	-0.8	-0.4	-1.9	-0.1	-11.9	-11.0	-10.6	-9.5
전기및전자기기	89.1	-0.3	-0.1	0.0	-0.2	-3.2	-3.3	-2.5	-2.2
전력·수도·가스	54.3	-0.1	-0.1	0.1	0.3	6.9	6.8	6.8	4.3
서 비 스	298.1	0.1	0.0	0.2	0.2	0.1	0.3	0.4	0.4
음식점 및 숙박	41.0	0.1	0.1	0.3	0.3	1.8	1.8	1.6	1.6
운 수	50.6	0.0	0.1	0.7	0.2	-0.9	-0.1	0.6	1.0
금 융 및 보 험	30.9	0.1	-0.9	-0.5	0.2	-5.1	-5.0	-5.3	-5.9
기 타 서 비 스	40.4	0.1	0.0	0.0	0.1	0.3	0.4	0.5	0.6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특수분류별

○ [식료품] 전월대비 2.5% 상승

※ 전년 동월대비 2.1% ↓

○ [신선식품] 전월대비 10.1%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2.2% ↓

○ [에너지]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3% ↑

○ [IT] 전월대비 0.1%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1% ↓

○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 전월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3%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3년				2013년			
		4월	5월	6월	7월p	4월	5월	6월	7월p
식 료 품	64.8	-1.5	-0.6	0.3	2.5	-3.6	-2.3	-2.1	-2.1
식료품이외	935.2	-0.3	0.0	0.0	0.1	-2.5	-1.3	-0.9	-1.2
신 선 식 품	14.5	-8.7	-4.1	2.3	10.1	-16.8	-13.2	-13.0	-12.2
신선식품이외	985.5	-0.2	0.0	-0.1	0.2	-2.4	-1.2	-0.8	-1.1
에 너 지	92.4	-0.8	0.3	0.8	-0.2	-0.6	2.0	4.0	0.3
에너지이외	907.6	-0.3	0.0	-0.1	0.3	-2.8	-1.7	-1.5	-1.5
I T	109.2	-0.3	-0.1	0.0	-0.1	-2.8	-2.9	-2.3	-2.1
I T 이 외	890.8	-0.4	0.0	0.0	0.3	-2.6	-1.2	-0.8	-1.3
신선식품및 에너지 이외	893.1	-0.2	0.0	-0.1	0.2	-2.5	-1.6	-1.3	-1.3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 9. 3 ~ 9. 10

○ 조사방법: KREI리포터와 현지통신원¹⁾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518건 응답

○ 응답자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연령별	50세 미만	148	29.0
	50-60세 미만	204	39.9
	60-70세 미만	140	27.4
	70세 이상	19	3.7
합계		511	100.0
연평균소득	1천만 원 미만	47	9.3
	3천만 원 미만	185	36.6
	5천만 원 미만	156	30.8
	7천만 원 미만	54	10.7
	7천만 원 이상	64	12.6
합계		506	100.0
지대별	평야지대	181	35.4
	준산간지대	263	51.5
	산간지대	67	13.1
합계		511	100.0
주소등록종류	수도작	109	21.5
	과수	137	27.0
	노지채소	47	9.3
	축산	45	8.9
	시설원예	75	14.8
	특작	67	13.2
	기타	28	5.5
합계		508	100.0
영농규모별	소농	220	43.0
	중농	255	49.8
	대농	37	7.2
	합계	5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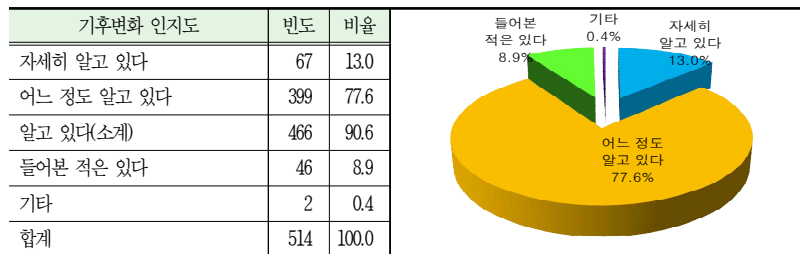
1) 연구원의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써, 일반평균 농업인보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과 온라인 조사라는 점을 결과 해석에 참고해야 함.

2) 조사결과

○ 농업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인지도 높아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자세히, 어느 정도 포함)는 응답이 90.6%로 농업인 10명 중 9명은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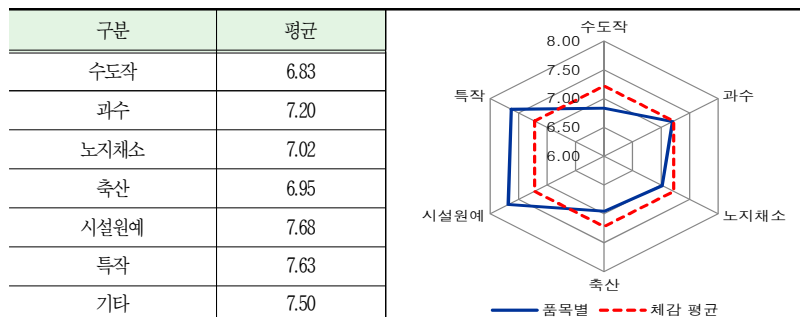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수도작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음. 반면, 축산 농가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음.



○ “기후변화가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 체감도 9점 만점에 7.22점

- 기후변화가 농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점 만점에 7.22점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기후변화가 농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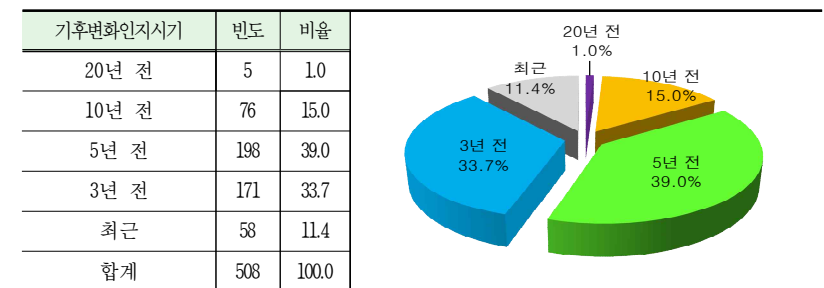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설원예와 특작 품목이 상대적으로 영향정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작과 축산 노지채소 농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를 보였음.



○ 5년 전부터 기후변화 체감도 급상승

- 농사와 관련해 기후변화를 느낀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20년 전 1.0%, 10년 전 15.0%에 불과했으나, 5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해 39.0%, 3년 전 33.7%, 최근은 11.4% 등으로 5년 전부터 최근까지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체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체감율이 낮았던 시기인 '10년 전'에는 수도작과 노지채소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년 전'에는 시설원예와 수도작, 특작 품목에서, '3년 전'은 축산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음.



○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 점차 증가, 연평균 25% 내외

- 최근 3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전체 생산 중 피해 규모)을 평균적으로 살펴본 결과, 2011년 20.50%, 2012년 26.43%, 2013년(8월 말까지) 25.34%의 평균 피해율을 보였음. 2013년 8월 말까지의 평균 피해율이 25.34%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율은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성 비교] 품목별 피해율은 수도작, 과수, 시설원예 품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 2011년: (평균 이하) 노지채소와 시설원예, 축산 품목 (평균 이상) 수도작, 과수 품목
- ※ 2012년: (평균 이하) 축산, 과수, 특작 품목 (평균 이상) 노지채소, 수도작, 시설원예 품목
- ※ 2013년(8월 말까지): (평균 이하) 축산, 노지채소, 특작 품목 (평균 이상) 수도작, 과수, 시설원예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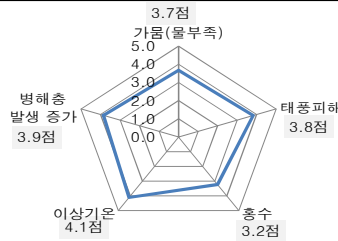
년도	평균 피해율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2011년	20.50	16.7	31.9	21.6	18.5	11.3
2012년	26.43	13.1	26.5	17.7	19.8	22.9
2013년 (8월 말까지)	25.34	11.0	18.9	15.6	14.1	17.0

○ 자연재해 중 ‘이상기온’이 농작물에 가장 영향 커

- 자연재해별 농작물 영향 정도를 가중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이상기온’에 따른 영향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해충 발생 증가’ 3.9점, ‘태풍피해’ 3.8점, ‘가뭄(물부족)’ 3.7점, ‘홍수’ 3.2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뭄(물부족)’은 노지채소, ‘태풍피해’는 수도작, 시설원에, 과수, 축산 품목에서, ‘홍수’와 ‘이상기온’은 시설원에서, ‘병해충 발생 증가’는 과수, 노지채소 품목에서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가중 평균	매우 크다	큰편	보통	미미 한 편	전혀 영향 없다
가뭄(물부족)	3.7	20.9	40.7	25.5	10.3	2.7
태풍피해	3.8	28.4	37.6	23.4	9.1	1.5
홍수	3.2	12.7	28.8	34.8	16.1	7.7
이상기온	4.1	29.3	55.5	11.8	3.2	0.2
병해충 발생 증가	3.9	18.8	53.2	23.0	4.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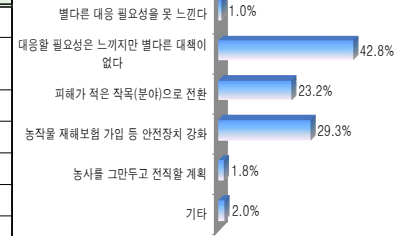


○ 농가 10곳 중 5곳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잦은 재해발생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강화’ 29.3%, ‘피해가 적은 작목(분야)으로 전환’ 23.2%로 10농가 중 5농가는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42.8%, ‘별다른 대응 필요성을 못 느낀다’ 1.0% 등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그만두고 전직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1.8%로 나타났다.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재해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농가는 축산에서, ‘피해가 적은 작목으로 전환’은 노지채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강화’는 과수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해발생대응계획	빈도	비율
별다른 대응 필요성을 못 느낀다	5	1.0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218	42.8
피해가 적은 작목(분야)으로 전환	118	23.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강화	149	29.3
농사를 그만두고 전직할 계획	9	1.8
기타	10	2.0
합계	5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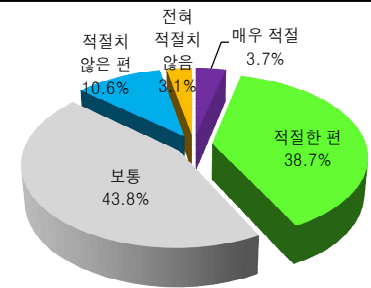


○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안 적절하다” 42.4%

-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안에 대해 농가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2.4%,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3.7%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였음. 다만, ‘보통’이라고 평가를 유보한 농가도 50% 가까이(43.8%)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는 과수와 노지채소 품목에서, 적절치 않다는 부정 평가는 축산, 특작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평가를 유보한 농가는 시설원에 품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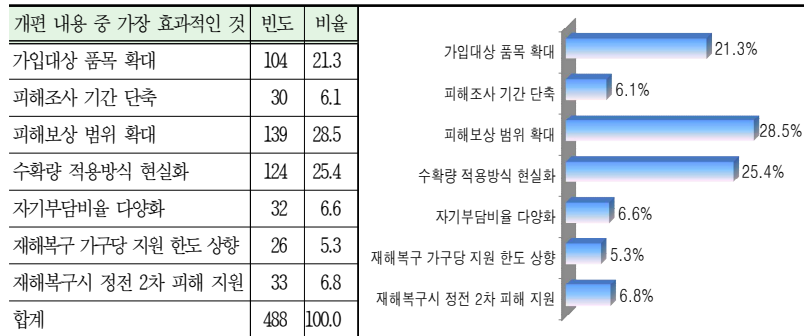
농업재해보험지원제도 평가	빈도	비율
매우 적절	19	3.7
적절한 편	198	38.7
적절(소계)	217	42.4
보통	224	43.8
적절치 않은 편	54	10.6
전혀 적절치 않음	16	3.1
적절치않음(소계)	70	13.7
합계	511	100.0



○ 농업재해보험 개편안 중 ‘피해보상 범위 확대’에 가장 큰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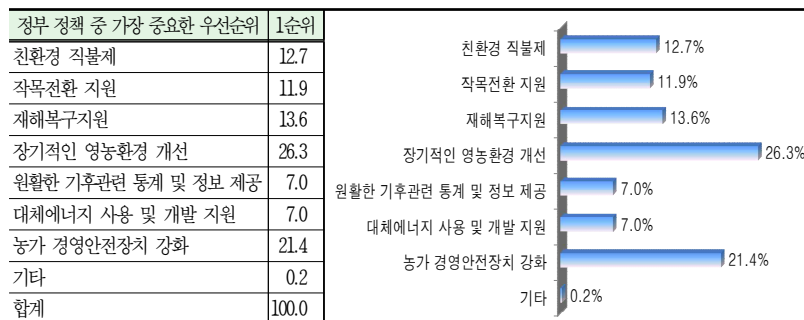
- 농업 재해보험제도 개편 주요내용 중 농업인들은 ‘피해보상 범위 확대’(28.5%), ‘수확량 적용방식 현실화’(25.4%), ‘가입대상 품목 확대’(21.3%) 등의 순으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음.

[특성 비교] 품목별로 살펴보면, ‘피해보상 범위 확대’는 수도작과 노지채소 품목에서, ‘수확량 적응방식 현실화’는 수도작과 시설원에 품목에서, ‘가입대상 품목 확대’는 축산과 시설원에, 특작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기후변화 대비책으로 ‘장기적인 영농환경 개선’ 우선 꼽아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영농환경 개선’(26.3%)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농가 경영안전장치 강화’(21.4%), ‘재해복구 지원’(13.6%), ‘친환경 직불제’(12.7%) ‘작목전환 지원’(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대체에너지 사용 및 개발 지원’(7.0%), ‘원활한 기후관련 통계 및 정보 제공’(7.0%) 등으로 선호하였음.



3) [자유의견]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인식조사

- **(농업재해보험)** 해마다 태풍과 가뭄,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는 작물이 상당수임. 특히 홍수 피해는 복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복구비용이 많이 들어 매년 복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현재 농업재해보험은 과수의 경우 동해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인삼의 경우 발작물 보상품목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하기도 하며, 보상품목이라도 연중보상이 어려운 점 등 몇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음. 농업재해보험은 특약을 간소화해 농업인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보험이 아닌 국가보험으로 만들어 의료보험처럼 농가와 국가가 반반 부담한다면, 농가의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농업인 자구노력)**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돌풍피해가 많은 농장 앞에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은 후 바람을 막아 피해를 현저하게 줄인 예를 통해 사소한 노력의 힘을 볼 수 있음. 가령 동해피해를 앞두고 과수나무에 보온재를 감싸준다거나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수를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담을 쌓고, 폭염에는 땅에 물을 뿌려 기온을 낮춰주는 사소한 방법으로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한해 열심히 농사지은 한 작목이 완전히 피해를 입었을 때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온변화에 강한 품목을 분산 재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상예보)** 대표적으로 수도작의 경우, 가을장마로 인해 등숙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모내기를 하여 가을장마기간에 등숙기가 겹치지 않게 해야 함. 무엇보다도 기상예측이 중요한데, 일기예보 방송은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정확성이 떨어져 농업인 사이에서 신뢰도가 낮은 실정임.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업을 중심으로 보다 과학적인 기상예보가 요구됨. 지역별 기상데이터를 분석, 또는 장기 예보를 통해 농업인들이 지역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 농사를 계획,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예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품목전환)** 농산물의 주산지 위치가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해가는 것을 보면, 현재 기후변화를 쉽사리 실감할 수 있음. 오히려 온난화를 이용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거나, 여러 기후변화에 의한 기존 작목의 피해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할만한 신품종을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지속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을 관찰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판단해 심각하게 피해를 받은 작물의 경우, 농촌 현장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미리 작목전환이 가능하도록 공지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작목전환에 따른 비용지원, 자연재해 대비 교육 등을 실시함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임.
- **(영농환경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시설 현대화, 정비, 친환경 농업자재 사용 등 영농환경 개선이 필요함.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대응이 대농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소규모 농가는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실정임. 모든 농가에게 공통적으로 영농교육, 영농다각화, 기업영농화, 영농멘토링 등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다양한 영농보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친환경 농업실천)** 최근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분별한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에서 비롯된다고 봄.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급적 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생산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야 함.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고, 오폐수 처리 개발로 오염물질 방류 최소화, 축분을 이용한 농가형 메탄가스 공급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에너지 사용 등으로 계속되는 기후변화를 막는데 노력해야 함.
- **(정보제공)**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이 날로 극성을 부리고, 돌발적인 병충해 발생 시 신속무책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됨. 농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충해 등 사소한 정보를 포함해 태풍, 폭우, 폭설 등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주의를 알릴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면 좋겠음. 지역별 기후, 또는 대처방법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작목재배방법, 영농 사례 등을 소개하는 농업인 전문 채널을 방송에서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9월 9일~1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안·중 FTA 1단계 협상 완료…품목수 90% ‘관세철폐’

- 한·중 FTA 7차 협상 9.5일, 1단계 협상 마무리.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 합의…산업통상자원부, 8.6일, 상품분야 품목군별 분류에 대해 **초민감품목군*은 10%(품목수 기준), 즉시 철폐되거나 10년 내 철폐, 10년 이상에서 20년 내 철폐되는 품목군 90%** 적용. 이에 따라 전체 품목 1만2,000여개 중 약 1,200여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 특히 초민감품목군 10% 비중이 모두 농수산업분야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등 한·중 FTA 협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고르게 배분해야 하는 만큼 **농민들의 요구만큼 농수산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 ▲위생검역에서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 보장 원칙 합의. ▲농식품부 관계자…관세철폐 비중은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본격적으로 2단계 협상에서 개방 수준 나올 것, 1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8차 협상에 앞서 1차 양허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모여 내부 협상 진행, ▲한농연…초민감품목 10%를 전부 농업분야로 할당, 2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 위한 정부 의지 필요



※ 양허제외 또는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TRQ 등을 적용하는 품목군

자료 : 한국경제(2013.9.7.) / 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농어민신문(2013.9.9.) / 농축유통신문(2013.9.10.)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3.9.11.) / 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9.12.) 한국농정신문(2013.9.16.)

□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 정부,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9.9일부터 전면 금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 다만 **기존 수입돼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며,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 ▲일부 시민단체… 후쿠시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산물만 금지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기준치 강화 및 방사선 검사항목 확대 주장. ▲김재원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토대로 일본 북동부뿐 아니라 남서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 이에 따라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훗카이도와 도쿄 등 다른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국내산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수산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심각한 피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울만한 추가대책 필요. 반면, ▲**일본 수산청**,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 수입 금지 철회 요구 위해 9.16일 항의 방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 할 경우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 검토**. 한편, ▲일본 기상청, 제18호 태풍 ‘마니’ 강타(9.16일)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물질 유출 더 심각 우려

※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건수…훗카이도 67건, 도쿄현 22건, 지바현이 16건, 에히메현 10건, 이바라키현 4건, 구마모토·가고시마·시즈오카현 각각 2건의 순

※※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 분석(9.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5개현서 총 8,000여 톤 수산물 수입, 특히 후쿠시마현과 맞닿아 있는 미야기현에서 수산물 수입량 전년대비 160배 이상 급증

※※※ (일본 입장) 수입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 희박, 스테론톨 등 다른 핵종에 대한 추가검사 요구도 철회 요청, (정부 입장)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없고, 일본 측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결정, 수입 금지 해제 계획 없음을 전달

자료 : 경향신문·농민신문·세계일보·이투데이·중앙일보·YTN(2013.9.9.) / 농수축산신문(2013.9.12.) / KBS NEWS(2013.9.14, 16.) / 머니투데이·연합뉴스·한국수산경제(2013.9.16.) / 국민일보·MBC 뉴스투데이(2013.9.17.)

□ 올에 잿소 원유 생산성 낮아져 농가 ‘안심’

- 낙농진흥회, 올 7월 말까지 원유 생산량 123만1,500t. **강 추위·무더위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잿소의 원유 생산량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잿소 사육마릿수 감소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던 2011년을 제외한 **최근 5년 같은 기간 중 최저 수준**…(‘09년 1~7월) 124만3,600t → (‘10년 1~7월) 124만 2,000 → (‘11년 1~7월) 110만t → (‘12년 1~7월) 124만6,000t.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낙농가들의 경영에 악재**로 작용

자료 : 농민신문(2013.9.11.)

□ 정부, 공공비축 쌀 37만 톤 매입

- 농식품부, 9.9일, **2013년산 공공비축미 37만 톤**(벼 40kg 기준 1,285만 포대) **9.23일~12월 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감안해 **1월 중 확정**,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5만5,000원 우선 지급. **우선지급금***은 8월 평균 산지쌀값 17만6,903원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 6만1,321원의 약 90% 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6,000원 인상**.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등급별 우선지급금(포대벼 기준)은 특등급 5만6,820원, 2등급 5만2,560원, 3등급 4만6,780원, 산물벼(물벼, 건조하지 않은 벼)는 포대벼(건조 벼) 가격에서 포장비용 820원 차감

※ 지난해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쌀값의 80~95% 수준에서 결정한 바 있음.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9.10.) / 농민신문(2013.9.11.) / 한국농어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9.12.) / 한국농정신문(2013.9.16.)

□ 공공비축대상 양곡 쌀·밀·콩 3종으로 확대

- 농식품부,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대상 품목**을 쌀에서 **쌀, 밀, 콩으로 확대**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9.23일부터 시행. 정부, 식량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쌀을 비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 공공비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비축 양곡의 매입과 판매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 기준을 기존 공개입찰가격,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에 추가해 도매시장 가격 등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하는 가격 포함***하기로. 또한,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도 **외상으로 판매**,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 연 7% → 연 5% 인하**해 농업인 등의 부담 완화

※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 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 요건에 부합 하기 위한 조치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9.16.)

□ 재해보험 시설배추 등 3개 품목 추가

- 농식품부·기획재정부, 9.16일, 2014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지난 5.2일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 대폭 반영**할 계획. **▲재해보험 대상품목...**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 → **(‘14년) 59개(농작물 43, 가축 16) 확대**, 신규로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 품목, 앞으로도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를 보장(종합위험보장방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올해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보조금(보험료의 50% 지원)의 총액도 함께 증액.** 이러한 조치는 재해보험 조기 정착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 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 단감에 대해 3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 추진

자료 : 농축유통신문(2013.9.16.)

□ 농어업법인 정책적 육성책 마련

- 신성범 의원, 8.3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한 법률안 대표 발의**...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만1,700여개의 **농어업법인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농어업 법인의 설립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주요내용**...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 농어업 법인의 형식을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 통합농어업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공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 농촌자원을 제조·가공하는 **2차산업**과 유통과 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의 **3차 산업과 연계, 6차 산업화하는 농정시책 추진에 크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9.12.)

□ 환경부, 남은 음식물 사료와...농식품부와 ‘엇박자’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축산업과 환경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9.10일, 환경부·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주관, **남은음식물 재활용 사료로 사육한 돼지고기·계란 시식회*** 개최, **▲환경부...음식물 사료로 키운 돼지는 일반사료를 먹인 경우보다 맛과 품질 우수**, 옛날 시골집에서 음식물 찌꺼기로 자연적으로 키우던 고품질의 돈육 맛 재현, **▲생산자단체 및 축산업계...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것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각,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재활용 꺼리는 실정, 축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미강이나 깻묵 등 농산부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으면서 축산농가들이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TMR사료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환경분야 전문가...축산 관련 환경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소통**을 통해 축산업과 환경 분야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모색

※ 음식물 사료로 키운 돼지와 계란의 품질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9.16.)

□ 농식품부-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놓고 갈등

- 8.8일,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반발**
 -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 둔다는 입장이지만 **두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난항 예상**
- (농림축산식품부) 8.30일, **농업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라며 **세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한 수정 요구**
 - 60여개의 농림축산업 관련 세법 개정안 중 '연 수입 10억 원 이상 작물 재배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5건에 대해 수정 필요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사전 조율할 때 이미 협의 종결**, 이해관계자인 농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뒤늦은 이의 제기는 행정의 신뢰도 문제**
- 통상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재부의 공식 발표 이후 문서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이견'>

기획재정부 입장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식당 자영업자들이 허위로 대량 매입을 신고해 과도한 공제를 받는 경우 근절	<농수산물>	• 식당 자영업자들이 쌀 수입세료를 늘릴 가능성 높음
•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필요		• 연 10억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10억까지만 농사짓는 부작용 우려
•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비전업 농민의 양도세 감면 기준 정비	<고소득 작물재배업자 (연 10억 원 이상 수입)과세 전환>	• 소득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농업인들 피해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의 형평성 필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강화>	• 소득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농업인들 피해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의 형평성 필요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 공공목적 농지 수용으로 대토를 얻은 농업인에 대한 혜택 필요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의 형평성 필요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조건 강화>	• 농업인들의 법인 참여를 저해

자료 : 서울신문(2013.9.10.)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 본 자료는 2013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8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4.4억\$ 달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8월 농림축산식품 수출] 4.4억 불,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 (부류별) **신선농식품 0.9억 불, 가공식품 3.5억 불**, 전년 동기대비 각각 **7.1% ↑, 3.3% ↓**
- **[8월 농식품 수출 감소 원인]** 가공식품의 전반적 수출 부진과 궤련(△6.1%)·음료(△7.0)·라면(△10.8)·설탕(△28.2) 등의 대형 수출품목 수출 감소

□ 부류별

- **[신선농산물]** 인삼류(69.7%)·닭고기(46.1) 등은 증가한 반면, 김치(△18.3%)·유자차(△8.0)·과실류(△8.6) 등은 감소
 - **(인삼류)** 홍삼이 인삼 수출의 약 60%차지, 중화권 시장에서 재고 물량 소진과 중추절 판촉행사 등으로 수출 증가
 - **(닭고기)** 일본 등에서 수출물량 재고 증가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베트남, 홍콩 등에서 냉동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수출실적 증가
 - **(유자차)**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지속적인 홍보·판촉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본·홍콩·미국 등에서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실적 감소
 - **(과실류)** 하반기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
- **[가공식품]** 커피조제품(11.6%)·비스킷(4.2) 등이 증가한 반면, 음료(△7.0%)·라면(△10.8)·고추장(△0.6) 등은 감소
 - **(커피조제품)** 중국 등에서 젊은층의 소비량 증가와 일본의 원전사고 관련 식품안전성 이슈화로 일시적으로 수출 증가
 - **(비스킷)** 중국 수입과자 및 베이커리 시장의 성장, 홍콩 프리미엄 고객층의 기호 충족 등으로 수출 증가

- (음료) 미국에서 엄격해진 수입제품 통관절차와 러시아에서 심화된 수출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수출 감소

□ 국가별

- ASEAN(26.2%)·홍콩(31.9%)·중국(8.3%)은 증가한 반면, EU(△29.3%)·일본(△11.9%)·미국(△2.6%)·러시아(△5.3%)는 감소
- (홍콩) 신선, 가공식품 전반에서의 활발한 소비활동과 새로운 상품에 대한 빠른 흡수력 등으로 수출액 증가
 - ※ 증가품목: 껌, 맥주, 홍삼, 비스킷, 닭고기 / 감소품목: 라면
- (중국) 증추절을 앞둔 소비확대 및 한국 농식품의 적극적 판촉 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증가품목: 홍삼, 조제분유, 비스킷, 라면, 채소종자, 유아차
- (EU) 식물 부문 경기 침체에 따른 식품 소비의 위축과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조미료, 인스탄트면 등의 수입 감소
 - ※ 감소품목: 혼합조제식료품, 참치, 기타조제식료품, 인스탄트면
- (일본) 채산성악화로 인한 대일수출 어려움과 화훼, 주류 등 대일본 수출 점유율이 높은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 증가품목: 참치 / 감소품목: 제3맥주, 소주, 백합, 파프리카, 라면
- (미국)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의 인기가 지속되는 반면, 인스턴트 커피류 소비 감소로 수출액 감소
 - ※ 증가품목: 고추장, 김치, 홍삼정 / 감소품목: 배, 라면, 커피조제품

<2013년 8월 국가별 농식품 수출 현황>

단위: 백 만\$, %

국 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03.4	75.2	37.2	18.6	25.5	16.7	82.6	18.4
증감율	△11.9	8.3	△2.6	△5.3	31.9	△1.7	26.2	△29.3
(수출비중)	22.3	16.9	8.4	4.2	5.7	3.8	18.6	4.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